이준석 '6개월 당원권 정지' 에 "당대표직 물러날 생각 없다"

국힘, 당분간 내홍 지속될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결정
20대 젊은층 지지세 동원 여론전 전략
당 일각서 '말도 안되는 징계' 목소리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준석 국민의 당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이 대표가 반발하고 있다. 또 여권 내에서 징계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는데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남성 지지층들의 '징계 철회' 촉구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내홍은 지속될 모양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새벽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자진 사퇴 여부에 선을 그었다.

이어 "그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 조치하겠다"며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비쳤다.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온라인 당원 가입 글을 공유하며 당원 모집 반격에 나섰다. 이는 윤리위 결과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2030 청년층의 결집세를 모아 여론전 및 자기세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이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030 보수 청년층이 많은 'FM코리아'(펨코)에서는 "도로 자유한국당까지 불과 2개월" "토사구팽의 전형" 등 이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는 '당원 가입' 인증 글들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다.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준석 현상'이라 불리는 신드롬이 퍼져 당원 가입이 크게 늘었던 만큼 이번 징계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층들이 단합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날 오전 YTN 방송에 나와 "(2030 민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상징성을 덮을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윤리위)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반발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감정이입을 하고 이 징계를 본인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젊은 층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30 지지층의 반발을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식은 탈당을 하고 항의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는 오히려 그 층을 더 당에 입당을 시켜 자기 세력을 더 강화해서 여론전이나 당내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식의 전략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도 경찰 수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과 지선의 승리에 기여한 당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은 말도 안 되는 징계라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웅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를 조선시대에 역모죄로 처형 당한 무신(武臣) 남이 장군에 빗대어 '남이가 진 앞에 출몰하면서 사력을 다하여 싸우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마구 쓰러졌고 몸에 4,5개의 화살을 맞았으나 용색이 태연자약하였더라'라고 글을 올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과 지선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극렬 유튜버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라고 지적했다.

'나는 국대다'로 당 대변인으로 발탁된 박민영 대변인은 옳고 그름을 떠나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당헌당규상 명시된 이 이 대표의 자구 권한도 보장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재심 청구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 남은 절차를 기다린 뒤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면서 "이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게 되었지만, 가능한 많은 이들을 납득시키는 방향이라야 반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尹 지지율 첫 30%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긍정 37% · 부정 평가 49%
물가 급등 · 박순애 임명
지인 동행 논란 등이 주요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 동력으로 40%를 꼽는데 취임 후 두달이 채 안돼 40%대가 붕괴된 것이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7월1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7월 5~7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한 응답이 37%,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49%였다. '어느쪽도 아니다'는 3%, '모름 응답거절'은 11%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6%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가 7% 포인트 상승하면서 긍정과 부정간 격차가 12% 포인트로 벌어졌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이 뒤바뀌는 '네드크로스'가 나타난 건 이번 주 조사가 처음이다.

최고점을 찍었던 6월 첫째주 긍정평가(53%)에서 한달 만에 16%포인트가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7월 1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41%)보다도 낮았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셋째주(임기 2년차),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첫재주(임기 중반 이후)에 각각 청와대 문건 유출과 조국 전 장관 사퇴 등으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조사기간인 7월 5~7일에는 직전날인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이 이뤄졌고, 5일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 수리와 6월 물가 IMF이후 첫 6% 상승 등이 벌어졌다. 6일에는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으며 코로나19가 증가세로 전환한 데다 나토 순방에 민간인 동행 논란이 벌어진 시점이다. 윤 대통령에 '악재'가 대거 몰려왔던 시기으로 봐도 무방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54%, 부정34%), 부산울산경남(긍정 45%, 부정 3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부정평가는 각각 50%와 49%로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하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앞섰다. 특히 40대에서 부정평가(65%)가 긍정의 3배에 달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이 33%, 부정이 54%로 부정이 월등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뉴시스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정영택)가 지난 8일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북대학교 동문들을 모교에 초청해 축하연을 개최했다.

"20만 동문의 마음 모아 축하드립니다"

전북대 지선 당선 동문 축하연… 서거석 교육감 등 150여명 참석

"20만 동문의 마음을 모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정영택)가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북대학교 동문들을 모교에 초청해 축하연을 개최했다.

7월 8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린 이날 축하연에는 전북대 최백렬, 이재백 부총장과 정영택 총동창회장, 당선 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덕담을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대는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등 63명 동문이 당선됐다. 당선된 동문들은 저마다 짧은 소감과 각오를 밝히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영택 전북대 총동창회장은 "오늘은 전북대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뜻깊은 날"이라며 "전북대인의 역량을 모아 모교와 지역,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 등 당선자들은 "전북대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디서든 전북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은성 기자

민주 '박지현 신상털기'
유튜버 사건 윤리감찰단 회부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찾아가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8일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상에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신상털기 문제가 있었다"며 "(박 전 위원장의) 집 앞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스트리밍하는 유튜버의 과도한 행태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의 관련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 사안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하려 한다"며 "우리 당은 특정인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이버 공격, 범죄, 특정인 신상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참담하다. 기어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오늘 한 남성 유튜버가 제가 사는 집이라며, 어떤 주택 앞에 서서 1시간 가량 저를 비난하는 공개 스트리밍 방송을 했다"며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한 남성은 자신이 민주당 동작갑 권리당원이라고 밝혔다"고 피해 사실을 전했다. /뉴시스

"이동권,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민주 김윤덕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정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여객시설 및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해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김경수 기자

민주, 당대표 권한 축소 안한다… 공관위 구성권 현행 유지

"원포인트 개정, 지금 당장은 무리… 전체적인 재정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8·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지도부와 관련해 당대표 권한 축소 없이 현행대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권한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7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밝혔다.

전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구성 절차는 (최고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됐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당헌·당규상 충돌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어서 지금 당장은 원포인트 개정이 무리라 판단해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전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준위 당헌·당규 분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관위 구성 뿐만 아니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 등 다른 기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이것을 재조정하는 체계 정비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관위는 총선 등 공직선거에 나갈 후보자의 추천·심사를 담당하는 기구다.

앞서 전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따로 뽑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당규 개정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합의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뉴시스

'국가보안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이광철 전 의원, 40년만에 무죄

"수사권한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진술 조서 작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광철 전 국회의원(제17대)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을 비롯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이후 1983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그해 11월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는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작성됐고,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